

## 한반도 냉전구조의 해체와 동북아시아 협력

朴 尙 植\*

우근민 제주도지사님, 조문부 제주대학교 총장님, 김부찬 제주대 동아시아 연구소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신사숙녀 여러분:

1. 20세기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새로운 밀레니엄의 시작을 눈앞에 두고 있는 오늘날의 국제정세는 몇 가지 점에서 과거 冷戰時期와 다른 현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2. 우선, 냉전시기에는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兩極體制가 국제관계의 특징이었으나 脫冷戰時期에는 미국이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등장, 범세계적 주요문제에 직접 개입하는 1極體制가 형성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비록 군사적으로는 절대적인 힘의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 단독으로 세계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오늘날 세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3. 즉, 국가간에 정치·군사적 대결 위협은 감소된 반면, 상대적으로 국가내에서의 宗教, 人種, 種族紛爭 등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經濟分野를 중심으로 世界化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단일국가의 노력이나 정책만으로 해결하기 힘든 環境, 癡藥, 人權, 테러리즘과 같은 범지구적 문제가 국제사회의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국가간 相互依存性과 相互萬藤을 동시에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4. 아울러 미국의 헤게모니와 글로벌화에 대한 대응으로 범세계적, 지역적 차원에서 협력을 증진하려는 추세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범세계적으로는 유엔이 세계평화와 안전유지의 1차적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고, WTO가 세계 自由貿易秩序의, IMF가 국제 金融秩序의 유지자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NATO가 확대·강화되고 있으며, EU가 경제적 통합과 더불어 정치적 통합을 향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北美自由貿易地帶(NAFTA), 亞·太經濟協力體(APEC), ASEAN 등 지역기구들의 활동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ASEM과 같은 대륙간 연결고리를 마련하려는 노력도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 外交安保研究院長

5. 그러나 동북아지역을 놓고 볼 때, 이곳은 세계적 추세와는 또 다른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즉, 동북아에는 NATO와 같은 地域安保協力機構도, NAFTA나 EU같은 地域經濟協力機構도 부재합니다.
6. 우선, 군사·안보 측면에서 한국이 지난 1994년 미·일·중·러와 남북한이 참여하여 역내국가 간 불신을 제거하고 지역안보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東北亞安保對話(NEASED)를 제안해 놓고 있지만,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역내 다자안보대화로 東北亞協力對話(NEACD)가 있으나 이것은 기본적으로 정부차원의 대화라기보다는 민간차원의 대화로서의 성격이 짙다고 하겠습니다.

7. 그리고 경제 측면에서는 동북아지역의 유일한 多者經濟協力事業으로 지난 1991년 UNDP의 주관하에 남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 등이 참여한 가운데 추진된 豆滿江地域開發計劃(TRADP)이 있으나, 이 역시 참여국들의 이해관계 불일치로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8. 이처럼 동북아지역에서 지역 차원의 협력이 부진한 이유는 4강간에 전략적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한반도에 냉전구조가 상존하기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1997년 동아시아지역에 불어닥친 經濟·金融危機는 동북아지역 국가간의 협력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9. 한반도를 보면, 아직도 이곳에는 냉전구조가 그대로 존속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냉전구조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띠고 있습니다.
  - 첫째, 남북간에 정반대되는 정치체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 둘째, 남북한은 서로 自己體制 중심의 통일방식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 셋째, 남북한은 상호 군사적으로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 넷째, 남북한간에는 분단 후 50년 이상 '鐵의 帳幕'이 내려진 채 접촉이 없었거나 극히 제한되어 왔습니다.
  - 다섯째, 이상과 같은 이유들로 인하여 남북한간에는 相互不信이 심합니다.
10. 이러한 대외적 상황에서 한국은 '國民의 政府'가 들어선 후 당면 경제위기의 조속한 극복과 남북한간 항구적 平和體制 構築을 위해 새로운 정책을 추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1. 우선, 경제위기와 관련하여 정부는 국내적으로 4대 부문 즉, 勞動, 公共機關, 企業 및 金融部門 改革을 추진하고, 대외적으로 輸出增進과 外國人 投資誘致 노력을 적극 전개하여 경제붕괴의 위기는 모면하고 이제 어느 정도 안정기반을 구축하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12. 또한 군사·안보와 관련해서는 남북한간 이질성을 감소시키고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획기적인 對北政策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햇볕정책'으로 대변되는 이 정책은 '北韓의 武力挑發 不容', '吸收統一 排除', '和解·協力の 積極推進' 등 대북한 3원칙에 입각한 것으로, 이것은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방위력을 유지하면서 평화공존과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3. 햇볕정책은 역대정부가 추구해 온 상황별 대응정책 즉, 對決政策이나 封鎖政策, '당근과 채찍정책' 등과는 다릅니다.
14. 역대정부의 대북정책을 보면 이승만 정부로부터 박정희 정부 전반기(1953-1972)까지는 대결정책을, 박정희 정부 후반부터 전두환 정부(1972-1988)까지는 봉쇄정책을, 그리고 노태우 정부로부터 김영삼 정부(1989-1998)까지는 당근과 채찍정책을 추구해 왔었습니다.
15. 그러나 이러한 어떤 정책도 기본적으로 북한으로 하여금 赤化統一戰略을 포기하고 화해와 협력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내는데 실패하였습니다.
16. 햇볕정책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전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과 다릅니다.
17. 첫째, 당근과 채찍정책이 북한에게 화해정책을 추구하되 북한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對南挑發을 강행할 경우 즉시 강경노선으로 전환하였던 데 반해 햇볕정책은 북한의 도발 강도와 유형을 신중히 고려, 그것이 한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을 때는 대북한 和解와 交流·協力政策을 계속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18. 둘째, 햇볕정책은 人道主義 원칙, 政經分離 원칙, 相互主義 원칙하에서 대북한 교류와 협력을 추구하고 있는 바, 상호주의 원칙을 종전과는 달리 유연하게 해석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햇볕정책이 추구하는 상호주의 원칙은 북한측의 상응하는 조치에 대해 시차, 내용 등에 지나치게 구애받지 않고 대국적인 견지에서 해석하고 수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9. 셋째, 종래에는 미·일의 대북한 수교가 남북한관계의 진전과 調和와 並行的 원칙하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햇볕정책하에서는 조화와 병행의 원칙을 고집하지 않으며, 따라서 미국과 일본의 대북관계 개선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20. 넷째, 政經分離 원칙이 이전 정부와 다른 점은 경제교류·협력에 있어서는 기업체의 사업을 위한 북한 방문에 제한을 두지 않고 투자요건에 대한 제한도 거의 철폐하였다는 점입니다.
21. 그러나 政經分離 원칙에 따른 대북한 지원이 북한으로 하여금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우리를 위협하도록 허용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북한을 改革·開放으로 자연스럽게 유도함으로써 북한정권의 급작스런 붕괴를 방지하고 장기적으로는 북한으로 하여금 平和共存을 추구하도록 하는데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22. 이상과 같은 햇볕정책의 궁극적 目標는 근본적으로 冷戰構造의 解體 즉, 앞에서 언급한 제반 냉전적 특징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23. 한편 이러한 목표를 위해 정부는 포괄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놓고 있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상호 信賴構築措置의 마련
  - 2) 남북한 교류와 협력 증진
  - 3) 북한의 大量殺傷武器 개발, 생산, 배치, 수출 포기 및 남북한 軍備統制

- 4) 미·일과 북한의 관계 정상화
  - 5)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조치 해제와 경제원조 제공 지지
  - 6) 현 停戰體制의 平和體制로의 전환
24. 이러한 포괄적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은 현재 미국, 중국과 함께 북한이 참여하는 4者會談을 개최하고 있으며, 미·북간에도 별도로 미사일협상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은 북한에 대해 남북한 直接對話를 제의해 놓고 있습니다.
  25. 전반적으로 볼 때 햇볕정책은 경제적으로 自力으로 회생할 수 있는 기반을 상실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북한을 지원하는 한편, 정치·군사적으로는 북한의 武力挑發 위협을 강력히 견제하면서 압박보다는 柔軟性을 통해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6. 그러나 이러한 한국의 햇볕정책은 국제적, 특히 우방국가의 지지와 共助關係 없이는 달성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강력한 한·미·일 安保協力體制의 틀 위에서 4강과의 개별적 협력관계를 증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27. 한반도 平和體制 구축과 동북아 평화와 안전의 유지 사이에는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되면 4강간의 協力關係가 증진될 수 있을 것이며, 4강간의 협력관계가 증진되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용이해질 것입니다.
  28.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제적 지지 확보와 공조관계 강화를 위해 우리는 범세계적으로 UN, EU, ASEM 등 국제기구나 協力體를 통해 햇볕정책에 대한 지지를 획득하는 동시에,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는 APEC, ARF 등 정부간 기구, 아시아·太平洋 安保協力理事會(CSCAP), 아시아·太平洋 圓卓會議(Asia-Pacific Roundtable) 등 비정부간 기구를 통해 냉전체제 해체를 위한 우리의 포괄적 접근방안을 홍보하고, 이러한 기구에 북한이 참여하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29. 그리고 동북아에서는 이미 언급한 NEASED를 적극 추진하고 NEACD에 참여하면서 북한의 참여도 적극 요청하고 있습니다.
  30. 아울러 한·미·일 共助體制 강화는 물론, 양자차원에서 한·미 '21세기를 향한 戰略的 파트너십', 한·일 '새로운 友好協力 파트너십', 한·중 '21세기를 향한 協力 파트너십', 그리고 한·러 파트너십 증진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31. 이상에서 국제정세, 동아시아정세, 한반도정세를 일별하고 韓半島 平和定着을 위한 국민의 정부의 햇볕정책의 목적과 특성, 그리고 국제적 지지 및 공조의 필요성을 설명하였습니다.

이 회의를 통해 이상에서 제기한 문제들이 심도있게 논의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기초연설을 마치겠습니다.